



[금융] 디지털 티켓 끊는 보험사들 05



Economy

코스피	2165.63 (+7.73)	코스닥	661.32 (+0.08)
금리 (2년)	1.31 (-0.02)	환율 (원/달러)	1191.50 (+4.10) (5일)

AI 간판 기업들 증시 대거 입성

AI산업 급성장에 높은호응 기대
위세아이텍, 10일 코스닥 상장
솔트룩스 등도 IPO 주관사 선정



인공지능(AI) 간판 기업들이 올해 줄줄이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어서 AI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이 잇따를 전망이다.

올해 AI 머신러닝·빅데이터 기업인 위세아이텍이 오는 10일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데 이어, AI 대표 플랫폼 기업인 솔트룩스·마인즈랩, AI 의료 대표기업인 뷰노·루닛 등도 IPO 주관사를 선정하고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또 AI 솔루션 대표기업인 와이즈넷도 IPO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AI 번역 플랫폼업체인 플리토, AI 헬스케어 솔루션업체인 제이엘케이(JLK)인스펙션 등이 코스닥에 상장해 올해 AI 테마주를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AI 기업들이 올해 IPO에 대거 나서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AI 일등국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정부에서 대대적인 'AI 국가전략'을 내놓을 정도로 AI가 지난해와 올해 가장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의료 AI기업에 수백억원대 투자가 이뤄지는 등 AI 기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AI 기업들이 이전부터 IPO를 결정해 더 빨리 IPO를 할 수 있었지만 더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왔다"며 "AI가 급부상하면서 AI 기업이 증시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올해를 가장 좋은 시기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공지능협회측도 "AI 기업들이 줄줄이 IPO를 진행하는 것은 AI 산업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AI 기업들 중 제대로 된 매출 및 수익을 내는 기업이 거의 없고 기술력에서는 자신이 있는 만큼 주로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는 전략이다. 기술특례상장은 유망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적이 부족한 기업의 코스닥 진입을 돕는 제도이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진행되는 기술성평가에서 A,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L4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삼성, '투명&클린' 준법경영 맞올렸다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

삼성이 준법 경영을 위한 본격적인 맞을 올렸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지형 위원장과 심인숙 교수, 봉옥 변호사와 권태선 대표, 이인용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과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위원들의 처우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계열사들이 뇌물수수과 부패, 오톤 등 문제 등에서 법을 위반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조직됐다. ▲ 독립성과 자율성 ▲ 준법 감시·통제 ▲ 구체적 실행방안 구현 ▲ 전방위적인 준법감시 등 4개 사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앞서 이재웅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오른쪽)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해 10월 국정농단 관련 과거환심심 첫 공판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부터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 마련' 요구 받은 바 있다. 삼성은 이후 2개월여간 논의를 거듭해 준법경영위원회 조직을 발표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에 진정성을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진보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 부회장까지 직접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준법경영위원회 구성도 김 위원장에 위임했다.

외부 위원들도 김 위원장에 의해 진

보적인 인물들로 구성됐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 봉옥 변호사 ▲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삼성 계열사들도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미 7개 계열사가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후 이사회를 통해 설치와 운영에 합의했고, 10개 계열사가 준법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격상하며 준법 경영 감시를 강화했다. /김재용기자 juk@

신종 코로나 확진자 18명 정부, 치료제 개발 나선다

일본, 환자-바이러스 분리 성공
8억 긴급투입, 이달중 연구 착수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총 18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8억원을 긴급 투입, 신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일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이 바이러스를 활용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3·8·L6·L7면)

일본은 환자 호흡기 검체(가래 등)를 세포에 접종해 배양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식을 확인했고,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한국 분리주 이름은 'BetaCoV/Korea/KC-DC03/2020'으로 붙여졌다.

이 바이러스는 중국(우한, 광둥),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등 국외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일치(99.5~

99.9%)했다.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긴급 현안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8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국내 확진자의 임상 면역학적 특성을 연구하고 치료용 항체 개발을 위한 광범위 항원과 항체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백신 항원 전달체와 불활성화 백신 등 다양한 형태의 백신을 개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은 말 그대로 신종 감염병이어서 현재 치료제나 백신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증요법과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랩디시비르), HIV 치료제(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등 기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이날,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2명 추가 발생했다. 일본과 태국에 이어 싱가포르 입국자가 신종 코로나 확진을 받으며 중국 이외 감염 국가는 모두 3개로 늘어났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하루가 긴 방역봉사단들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에서 한국방역협회 서울특별시지회 방역봉사단원이 마스크를 쓴 채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몸값 뚝 암호화폐 '과세 암초'... 논란

기재부 과세방안 논의에 우려 높아

최근 다시 가격이 오른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암초를 만났다. 본격적인 과세 논의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상당수 자산 거래량이 침체되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하반기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세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불거진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거래 금액의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뒤 남은 40%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원천징수의

무가 생긴다며 취득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

최근 암호화폐는 요동치는 증시 상황과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800만원 선을 오가며 부침을 겪었던 1비트코인(XBT)의 가격은 지난달 19일 990만원 선까지 상승하더니 지난 4일 1080만원 수준까지 뛰어 올랐다. 비트코인이 오른 시기와 신종 코로나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이 맞아떨어졌다.

최근에만 지난해 말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며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금과 함께 값어치가 뛰어올랐다. 암호화폐를 대체 투자처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과세 문제와 암호화폐의 상승세가

맞물리며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투자자들은 투기적 요소를 부각해 옥죄더니 갑자기 정책 기조를 바꿔 시장의 혼란을 불러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거래소처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도 불만을 높이는데 한몫했다. 한 투자자는 "투자자보호 방안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서는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암호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려면 정확한 취득 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인 여건상 쉽지 않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들리는 이유다. /송태화 기자 atvin@